

한전공대 설립 본격화

국가균형발전위, 내년 1월 4일 '기본 협약' 체결식
광주시, 제안서 제출 자치구와 추천 부지 선정 토론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한전공대 설립 관련 기본협약' 체결식을 내년 1월 4일 개최하는 등 한전공대 설립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또, 광주시는 24일 한전공대 후보 부지 제안서를 제출한 4곳의 자치구와 함께 한전공대 추천부지 선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관련기사 3면】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지원위원회 차원에서 새해 한전공대의 성공적 설립에 대해 지자체와 한전의 상호 협력과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기본협약이 다음달 4일 체결된다. 한전공대 유지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입지 선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의지도 확인될 예정이다.

특히, 최종 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내용 중 산학연 연계성과 공학·철도·도로 등 접근성, 대학운영 재정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기본협약에서도 한전공대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을 다짐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열리는 '한전공대 설립 관련 기본협약' 체결식에는 범정부 지원위원장을 맡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광주시장·광주시의회 의장, 전남지사·전남도의회 의장, 한전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본협약에는 한전공대의 성공적 설립에 대해 지자체-한전의 상호 협력과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은 2022년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지자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한전공대 부지선정과 관련해 한전의 최적 입지 선정에 대한 절차와 결과를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지자체는 한전공대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전공대 유선정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의 선정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데 행정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과 연구소, 산업단지를 한곳에 조성하는 한전공대는 대학원 중심의 '작지만 강한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중간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부지 면적이 최소 120만㎡이며, 정원은 1000여명이다. 개교 목표는 2022년 3월이며, 한전은 다음 달에 최종 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애초 이달 공개 예정이었던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된 최종 용역 보고안은 내년 1월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내일 개성서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오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남북의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24일 통일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남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착공식에 참석한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방광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이 참석한다.

당초 북측은 내각 부총리급 인사의 참석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를 맡는 장관급 인사인 리선권 위원장을 주빈으로 내세워 남측과 '격'을 맞추기로 한 것

으로 보인다. 방광수 위원장이 이끄는 민족경제협력위원회는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이번 행사에 남측에서는 각기 100여명의 주요 내빈이 참석해 착공식을 축하할 예정이다. 또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와 러시아 교통부 차관,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유관국 해외 인사 8명도 착공식에 자리를 같이한다. 정부는 남측 인사들의 착공식 참석을 위해 서울역에서 개성 판문역까지 특별열차 9량을 편성해 운행할 계획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우리는 어린이 산타” 24일 오전 광주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빨간 산타모자와 망토를 입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부, 5·18단체에 110억 손배소 압기로

국무회의 최종 결정 ... “정확한 금액 산정 어렵고 지역사회 분열 우려”

정부가 5·18단체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접공사비 손해배상청구 소송 부제기 검토’ 안건을 보고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본보 12월20, 24일자 1면>

당초 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 중 옛 전남도청 별관 원형 보존 문제로 5·18단체의 공사현장 점거농성과 정부의 별관 보존합의, 이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시공사에 간접공사비 110억원을 배상했다.

이에 문체부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멸 시효(1월 6일)를 앞두고 시공사에 배상한 간접공사비 가운데 5·18단체의 점거농성으로 비롯된 일부 금액에 대한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해 왔다.

법리 검토 결과, 문체부는 서울중앙지법 간접 공사비 소송 판결문(2016년 1월)의 해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최소 7200만원(판결문 확정액)부터 최대 28억 8700만원(추정 손해액)까지 이견이 있고, 손해로 인정될 정확한 금액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다. 또한 여러 책임 제한 사유로 인해 소송 대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당 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검토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약속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한 당시 광주 시민사회의 별관 원형 보존에 대한 신뢰 저하,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을 일부 보존하기로 한 상황에 따라 별관을 일부 보존하기로 한 상황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당사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합의 결정에 반한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300인 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주 52시간 유예기간 끝난다

정부가 24일 노동시간 단축 제도기간을 일부 사업장에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상당수는 주 52시간제 유예기간이 끝나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정과 최근 시작된 탄력근로제 개선 논의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제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이번 제도기간은 지난번과 같은 전면적인 제도기간 설정이 아니며 대상과 사유를 한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포함한 노동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낮추는 노동시간 단축은 지난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500곳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준비가 덜 됐다든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말까지 6개월의 제도기간을 뒤 주 52시간을 위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나무 베고 땅 파헤치고
개발에 신음하는 무당산 자락 ▶6면
최진석의 '노장적 생각'
허무(虛無)와 득도(得道) ▶18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NEW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잘 가, 피부 피로
잘 자, 내 피부

고흥 유자 6개를 고스란히 담아 유자비타민C 콤플렉스™의 향산화력으로
피부피로를 싸악 풀어 다음 날, 생기 가득 환한 피부

한울 韓律

· 전국 어린이·미용·마트·아모레퍼시픽 매장·아모레퍼시픽 온라인몰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http://www.amorepacific.com · 전화번호: 080-023-5454